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1년 9월 3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김대자 방사성폐기물과장(02-2110-5531), 문상민 사무관(5536)		

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개시

- 9.2(금) 원자력학회,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-

□ **원자력학회 컨소시엄**(원자력학회, 방폐학회, (사)그린코리아21포럼)은 '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및 로드맵'에 관한 **연구용역의 최종결과**를 **9.2(금)** 10:30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함

* 【연구용역 개요】 발주 :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, 수행기관 : 원자력학회, 방사성폐기물학회, (사)그린코리아 21 포럼, 기간 : 2009.12월 ~ 2011.8월

○ 원자력학회는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임

□ 금번 연구용역은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**'기술적으로 가능한 옵션'들을 제시**한 원자력 전문가들의 **과학적·기술적 검토보고서**임

○ 특히 연구용역은 **단기·중기·장기별**로 가능한 다양한 관리방안에 대한 **전문적 분석**(기술성, 경제성, 실현가능성) 결과를 담고 있으며,

○ 향후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시 **과학·기술적 근거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**될 예정임

□ 앞으로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**다양한 이해관계자**(지역, NGO, 언론, 소비자단체, 학계, 법조계 등)와 **일반 국민**으로부터 **충분한 의견수렴 과정**을 거칠 계획임

○ 의견수렴 과정에는 설명회·토론회·간담회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**다양한 소통 방식들이 포함**되며,

○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**「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」**이 구성·운영될 예정임

<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개요 >

◇ (목적)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동 분석·검증 및 향후 바람직한 공론화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

◇ (구성) 지역, NGO, 소비자단체, 언론, 법조계, 학계 등 이해관계 단체에서 추천한 30~50여명의 민간위원 (전체회의, 주제별 워킹그룹)

◇ (운영) 연구용역의 구체적 관리대안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주제별 토론

◇ (결과)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방향에 관한 대정부 정책건의서

□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**원자력위원회**(위원장 : 국무총리)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,

○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차원의 **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"기본원칙"**으로 확정되게 됨

□ 한편 상기 **기본원칙이 확정된 후**, 정부는 「방사성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**'공론화' 절차**를 거쳐 **'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'**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

〈 별첨 : 연구용역 주요내용 〉

① 단기 대안

○ 포화년도 검증결과 임시저장 포화시점을 **2016년 → 2024년까지 연장** 가능

- 이를 위해 **1990년부터 시행 중인** ①부지내 이송, ②조밀랙, ③건식 임시저장시설 등 **임시 저장시설 용량확대 조치 지속** 필요

< 부지별 용량확대 조치 주요 내용 >

고리	·조밀랙 추가(신고리 1, 2호기) ·고리(1~4호기) → 신고리(1~4호기)간 부지내 이송
영광	·조밀랙 교체(2호기) 및 설치(5, 6호기 (旣발주)) ·부지내 이송(1~6호기)
울진	·조밀랙 설치(5,6호기 (旣발주)) ·울진(1~6호기) → 신울진(1~4호기)간 부지내 이송
월성	·건식 임시저장시설(Macstor) 추가 설치

* 조밀랙 설치는 1990년, 건식임시저장시설은 1992년, 부지내 호기간 이송은 1990년부터 시행

② 중기 대안

○ **임시저장시설 포화 후 최종처분장 마련시**까지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별도의 **'중간 저장시설'** 필요

< 중간저장시설 설치대안 >

◇ 집중식 : 별도의 특정부지 선정, 1~2개 중간저장시설 설치
◇ 분산식 : 現 원전부지내 중간저장시설을 포화시점에 따라 순차적 건설

* 세계 원전가동 30개국 중 22개국(미국, 일본, 독일 등)에서 중간저장시설 보유

③ 장기 대안

○ 재처리·최종처분 정책은 국제 동향[1], 재처리기술 연구완료 시점(~2028년)[2]을 감안하여 **장기적 검토** 필요

1) 현재 진행중인 '한미원자력협정' 개정협상에서 미국측은 재처리에 대해 2020년까지 동의 유보

2) 건식재처리기술(Pyroprocessing)의 실증연구 결과는 2028년 예상 (교과부)